

‘13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행정관리역량부문)

2014. 1

문 화 재 청

# 1. 자체평가 총평

## (1) 인사관리

-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인사정책의 추진과 이를 통한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
- 또한 정부 3.0의 구현을 위하여 부처간 인사교류를 지속 추진 하였으며, 과장급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를 확대·지정
- 균형인사를 위한 5급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은 목표에 다소 미달 하였으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은 목표 달성

## (2) 조직관리

- 정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통합정원제 및 유동정원제 시행을 통한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옴부즈만 제도 운영 등 국민소통·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과 문화재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함

## (3) 정보화관리

- 공공정보 제공 개방을 위한 계획수립, 개방실적, 인식제공 노력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매우 우수함
-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보 발굴 및 피드백 등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EA 성숙도 측정에 참여한 '08년 이후 종합 성숙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13년 현재 EA 기반의 업무절차가 정착된 EA 추진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손쉽게 문화재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내 손안의 문화유산 해설사'와 같은 좋은 공공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2. 분야별 평가결과

### (1) 인사관리

#### □ 상시학습 이수실적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학습여건 조성
  - 연간 상시학습 이수시간 설정(80시간)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 이수 의무화
  - 외부 직무역량 강화 집합교육(1박 2일 10시간 이상) 이수를 의무화 (부서원의 40%)함으로써 참여형 교육 유도

#### □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개발 및 건강증진 도모
-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 실시와 연가 사용의 적극 추진을 통해 부처 자율목표 달성

#### □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전년대비 기관 간 인사교류 실적이 1건 → 2건으로 증가
- 향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상·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인사교류 추진 독려

####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 2013년 개방형 직위(국립문화재연구소장) 및 공모직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를 공모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임용
  - 선발결과 모두 내부직원이 대상자로 선발되어 외부 인력이 유입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 과장급 개방형 1개 직위 및 공모형 1개 직위를 추가 신규지정

□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는 목표인 7.1%를 초과 달성 (7.58%)하였으나, 2013년 신규지표인 5급 여성관리자 임용현황은 16.79%로 목표(19.7%)에 미달

(2) 조직관리

□ 정부위원회 운영 내실화

-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실적(연간 4회 이상) 제고는 물론, 위원회가 협력·소통의 매개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 및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대상위원회(3)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운용심의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 (연간 4회이상) 회의개최 실적(66.7%), 현장전문가 위촉비율(88.8%)
  - \* 여성참여율(28.6%) ☞ 국정과제(65-1) : '17년까지 여성참여율 40% 달성

□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를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화

-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정원으로 지정·관리
  - 감축인원 : △8명(본부 3명 / 소속기관 5명)
    - \* 5급 1명, 6급 3명, 9급 1명, (구)기능직 3명
- 정부조직의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유동정원 지정·운영
  - 지정인원 : 20명(대상인원의 6.3%) \* 안전행정부 권장비율 : 5~10%
  - 배정인원 : 유동정원 20명 중 20명 배정(100%)

□ 온·오프라인 국민소통·협업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 주요정책 홍보계획 수립·시행
  - 정책내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소통방향, 홍보 메시지·전략 개발 등 정책홍보 계획 수립
- 정부3.0,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정책소통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견 반영

-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 의견 반영
  - 민원(국민신문고)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모니터링으로 개선 추진
  - \* '13년 소관부서 개선권고 : 81건

□ 온·오프라인 동시 의견수렴(공청회 등)

- 법률 개정사항, 온·오프라인 동시 의견 수렴 후 의견 반영('13.9.6)

□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다양화

- 온라인 채널
  -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운영
- 오프라인 채널
  - 옴부즈만 제도, 기관 소식지 발간, 고객지원센터 운영

□ 행정지식 공유·소통

- 정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업무지식을 문화재청 KMS와 GKMC (정부통합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유·소통 활용
  - 기관KMS : 보고서(687건), 아이디어(137건), 답변(121건)
  - GKMC활동건수 : 5,466건

## □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

- 비공개결정 통지서 총 10건(동일 내용 제외)을 대상으로 처리의 적절성을 측정한 결과, 평가기준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건수는 9건으로 비공개 업무처리 방법을 수시로 안내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처리기한(10일)을 준수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결정통지서가 1건이 있어 다소 미흡함을 보임
-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서는 총 2건으로 정보공개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도록 하여 부존재 결정의 신중을 기하고,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은 바람직하나 처리기한(7일)을 지키지 않은 결정통지서가 1건이 있어 지속적인 교육 및 노력이 필요함

## □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및 정보내용의 충실성

-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부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문화재청 정보공개모니터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대규모 예산 사업,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 및 문화재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대상으로 적절하게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공개를 실시하였음
-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내용의 충실성은 정보공개 코너 개편에 따른 가독성 개선 및 해당 정보의 공개시기, 주기를 현행화 하여 적극 공개하고, 페이지를 바로가기로 연결하여 정보공개 목록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게 하였으며, 원문을 다운로드(PDF, HWP) 하여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보내용의 충실성을 높였음.

### (3) 정보화관리

#### □ 공공정보 제공·개방

- 문화유산 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사전정보공표 대상 업무 발굴 및 공개 확대(20개 항목 발굴)
  - 원문정보 개방에 따른 전자문서 정비(총 212,244건 정비)
  - 문화재 관련 학술연구보고서 1,172권 전자책(e-Book, PDF파일) 홈페이지 업로드
-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대국민 개방
  - 문화재청 소식, 문화유산 정보DB 등 개방(문화재 상세·목록·이미지, 문화재통계 서비스 등 15개 목록 개방)
  - 문화유산 콘텐츠 대국민 개방(공공누리 4유형→1유형으로 변경)
  - 문화유산의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허브(Hub)서비스 개통  
⇒ 기 구축 DB, 연계·수집 정보, 공유 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개·개방, 원-스톱 정보서비스 제공 (180~200만 건 / 시범 개통 11월, 확산개통 '14.1월)

#### □ 정부 업무서비스 및 정보 통합 관리·운영 성숙도

- (종합 역량) EA 기반 업무 절차가 정착된 수준인 3단계(3.78)로 측정
- (수립 역량) 범정부 EA 정보가 충실하게 등록된 수준인 4단계(4.33)로 측정
- (관리 역량) EA 추진의 현황 및 가시적 성과가 최고의사결정자(CEO)에게 보고·조치되는 수준을 의미하는 4단계(4.00)로 측정됨
- (활용 역량) EA가 기관 업무 전반에 활용되고, EA 기반 업무 절차가 정착된 수준인 3단계(3.00)로 측정됨

#### □ 클라우드 전환 노력도

- 클라우드 전환 추진계획 수립 : 1건
  - 클라우드 전환 검토 및 이관 계획 수립
- 클라우드 전환 추진을 위한 노력사례 : 1건
  - 광주통합전산센터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업무협의

### 3. 주요사례 분석

#### (1) 인사관리

##### □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 유연근무제 운영실적은 전년 대비 31명 증가('12년 70명→'13년 101명)
  - 특히,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독려('12년 0명→'13년 5명)
- 부서원 연가 사용 실적 부기관장 보고 : 연가 사용율(61.6%)

##### □ 외부와의 임용·교류 확대 추진

- 정부 3.0의 구현을 위한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를 통하여 정부 인력의 균형 배치, 국가정책 수립·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에 노력
  - 기관간 인사교류 실적 2건
  - 과장급 개방형 직위 1개, 공모직위 1개 직위 추가 지정

#### (2) 조직관리

##### □ 정부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무원 정원은 개별부처 자원이 아닌 정부의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부처단위 정원관리 칸막이를 탈피,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원 풀(Pool) 개념을 정원관리에 도입·운영
  - \* '13년부터 향후 5년간 1% 균분 지정(우리 청 : 총 37명 / '13~'14년 각 8명, '15~'17년 각 7명)
- 부처내 인력운영의 경직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원관리제도로 기능 쇠퇴한 분야 등의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한 유동정원제 적극 시행



\* 대상인원(일반직 4·5급 이하 317명)의 6.3%(20명)를 지정, 전원 (20명)을 연도중 발생하는 현안에 수시로 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 극대화 도모

□ 대표적인 민·관 협업 추진사례

- 법률 개정사항, 온·오프라인 동시 의견 수렴 후 의견반영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후 ‘장기 검토사항’으로 보류 조치(‘13. 9. 6)

건 명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상시근무 의무화 폐지	법 령 입 법 예 고 (‘13.7.19~9.30)	‘13.9.5/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수리기술과-3623/‘13. 8.27)

□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다양화

- 온라인 채널
  - 홈페이지 : 법령입법예고(10건), 문화재 지정예고(36건), 고시 등
  - 기관 대표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다음 ‘문화재사랑’)
  - 국민신문고 : 온라인 정책토론 12건(설문조사)
- 오프라인 채널 : 고객지원센터, 소식지 발간, ombudsman 제도

□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

- 정보공개청구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처리 상황을 수시 점검(유선전화, 방문, 메모보고 등)하고 비공개 세부기준을 작성 하여 법적 근거 및 판단 근거(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안내
- 정보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 관리부서의 협조를 통해 의무화 하여 부존재 판단에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조

□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및 정보내용의 충실성

-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법률에 근거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상 정보의 내용이 제목과 부합하도록 수시 점검함. 또한 정보의 원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국민 관심 사항 및 정보공개청구로 자주 청구되는 정보 등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 정보 위주로 선정

### (3) 정보화관리

#### □ 문화유산 정보 연계·수집

- 문화재청, 지자체, 유관기관(국사편찬위원회 등 13개 기관) DB 연계수집 (‘13.12월말)

기본정보	사진·동영상	도면	조사연구	합 계(누계)
59	76	27	11	184만건

#### □ 유관기관과의 문화유산 정보공유

-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 간 협약체결 및 정보공유(‘13.10월)  
⇒ 문화재청 지정문화재·유물정보(55만건), 중앙박물관 유물정보(78만점) 공유
- 문화재청·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제고

#### □ 문화재청은 EA 기반의 업무절차가 정착된 수준을 의미하는 3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재청의 EA 성숙도는 3.78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수준인 3.57을 상회함
- 문화재청은 EA 수립·관리 역량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나, EA 활용 역량은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4. 개선·보완 방안(전체)

### □ 상시학습 이수실적

- 변화하는 정부 인사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교류자에 대한 적응교육 강화

### □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 원격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조직성과평가와의 연계 및 스마트워크센터 마일리지제 도입

### □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인사교류 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5급이상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 실적 확대를 위하여 향후 더 많은 교류 직위를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제도 취지는 외부인력의 유입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및 공직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개방형직위·공모직위 2개의 직위 모두 내부직원으로 선발됨에 따라 운영의 아쉬움이 있음
- 향후 외부 응모자 접수를 높이고, 우수한 인력이 응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추진

### □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

-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목표치에는 미달하고 있음
- 채용, 보직, 승진 및 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공정한 기회 부여로 5급 이상 관리자급 남녀공무원의 인력구조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방안마련

### < 추진 근거 >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13~’17)
- 국정과제(65-1) : ’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13.10.31 기준)에 의한 목표(28.6%)는 달성(28.6%)하였으나, ’17년 최종목표인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신규·임기도래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 우선 위촉방안 등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 국민의견 반영여부 파악 등 추진현황 관리 강화

- 정책과정에 국민의견 반영여부 등 추진현황 관리 강화 필요  
- 옴부즈만 개선권고 사항 등

## □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 강화

- 정부 3.0에 기반한 정보 공유를 위해 비공개 처리 가급적 지양
- 비공개 결정 시 단순한 법률적 근거 제시에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판단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비공개 세부기준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및 충실성을 위한 신규 발굴 및 확대

-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열거된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신규 발굴 및 제목과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확대 추진

## □ 공공정보 제공·개방

-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보 발굴 및 피드백 등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용자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설문조사 등) 강화 필요

## □ 공공부문 EA 성숙도

- EA 정보를 통해 문화재청의 최신 정보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EA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소속·산하기관의 EA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현행화 등 소속·산하기관 EA 정보 품질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 EA 활용 시나리오 보완, 교육 및 독려, 성과 측정/분석/보고 등 일반 업무 EA 활용 강화 노력이 필요함

## □ 클라우드 전환 노력도

-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함
-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필요함

##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유동정원제 운영 내실화(문화재청)

### □ 추진배경

- 정부의 현장 중심 인력 증원(경찰, 소방 등) 및 통합정원제\* 지정·운영에 따라 우리 청의 필수 핵심적 기능 강화를 위한 수시직제·소요정원 등을 통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 직면

\* 전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5년간 매년 1%씩 총 5%)을 재배치하기 위해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신규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정원관리제도

- 특히 승례문 복원 부실, 석굴함 균열 논란 등 문화재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승례문 관리는 물론 국정과제·협업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등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인력 재배치 절실

### □ 추진내용(또는 추진 경과)

- 주요 국정과제·신규업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0. 5월부터 유동정원제 도입·시행
- '13년도 추진실적
  - 지정인원 : 20명[대상인원의 6.3% \* 행정안전부 구성비율 5~10% 범위내에서 부처별 결정]
  - 배정인원 : 20명(운영비율 100%)
    - \* 배정내역 : 국정과제 1명, 협업과제 1명, 대통령 지시사항 1명, 대통령 지역공약 3명, 주요정책과제 1명, 법령 제·개정 8명, 핵심사업 2명, 신규업무 3명

구 분	주요항목	주요내역	배정인력	비 고
총 계			20	
본 부(15)	국정과제(1)	문화재 디지털 자원화 기반구축	1(7급 1)	
	협업과제(1)	세계유산 관리	1(6급 1)	
	대통령 지시사항(1)	문화재 정책기획 기능 강화	1(7급 1)	
	대통령 지역공약(3)	고도보존·육성	2(5급 2)	
		반구대암각화 보존·활용대책 마련	1(4·5급 1)	
	주요정책과제(1)	민속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1(7급 1)	
	법령 제·개정(5)	감사인력 강화	2(5급 1, 7급 1)	
		문화재 기초조사 강화	1(6급 1)	
	신규업무(3)	궁·능 소방방재시스템 구축	2(5급 1, 6급 1)	
		승례문 관리	2(6급 1, 7급 1)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지원		1(6급 1)		
소속기관(5)	법령 제·개정(3)	정책 수립·조정기능 강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5급 1, 6급 1)	
		수증발굴 기능 강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연구사 1)	
	핵심사업(2)	왕실유물 복원처리 * 국립고궁박물관	2(연구사 2)	

## □ 주요성과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 새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급변하는 문화재 보존환경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향후 문화재 관리의 50년을 대비한 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핵심문화재 관리체계개선 방안** 마련

▪ (대통령 지시사항) **핵심문화재 관리체계 재검토 지시**(송례문 복구행사 보고 시, '13.4.22)

-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 고도지역(경주·공주·부여·익산)의 정체성 회복, 역사 문화환경 조성, 주민생활 개선 등 **법정사항의 체계적·효율적 추진기반** 마련  
\* 고도보존육성업무 강화를 위해 '14년 소요정원으로 전담기구(「고도보존육성과」) 확보
- 세계유산 등재 :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13.6.18 / 기록유산], **'김장 문화'**['13.12.5 / 무형유산]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가위상 제고** 및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 \* 총 등재건수('13.12.31 기준) : 37건

### 〈성공 요인〉

- 문화유산에 대한 전국민적 참여 및 관심 증대는 물론 **최우선 정책고객인 문화재 위주의 조직문화 확산**
- **조직관련 점검회의 「정원조정회의\*」 상설화**를 통한 유동정원 지정·운영의 **필요성 및 당위성 확보** \* 간부회의, 확대기관장회의 등과 연계
- 특히 배정시기에 있어 한꺼번에 일괄 배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 배정(3회 / 7월, 10월, 12월)함**으로써, **업무효율 극대화** 도모

## □ 향후 계획

- 2014년도 유동정원제 운영계획 수립('14.2월)  
※ 지정인원은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 배정(연중)

붙임 : 2013년 유동정원제 재배치 실적 1부. 끝.

# 문화재청 유동정원 재배치 실적

## I. 유동정원 지정 : 대상정원의 6.3%[20명] (본부 15, 소속 5)

구 분	총정원*	유동정원 대상				기타 (일반계약 등)
		계	4-5급	6급이하	학예,사서	
정 원	704명	317명	84명	233명	명	명
- 본 부	270명	180명	67명	113명	명	명
- 소속기관	434명	137명	17명	120명	명	명
유동정원 대상(5%)		15명	4명	11명	명	명
유동정원 지정(계)		20명	6명	11명	3명	명

\* 총정원은 2013년도 소요정원 확보 인력을 포함하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 문화재연구소와 수시직제 확보 인력(+2명)을 제외한 「2013년 문화재청 유동 정원 운영계획」 수립 시(6월)의 수치임

※ 소속기관 유동정원 [지정기준] 과 [실제 지정인원]이 상이한 이유

- 연구기관 중 긴급한 수요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재연구소는 예외적으로 연구직을 유동정원으로 지정
- 한편, 소규모 현업기관으로서 가용자원이 부족한 유적관리소, 궁·종묘·조선왕릉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은 유동정원 지정대상에서 제외

## II. 유동정원 운영현황

- 배정일자 :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 배정인력 : 유동정원 20명 중 20명 배정(100%)
  - 본부 15명 중 15명(100%), 소속기관 5명 중 5명(100%)
- 배정내역(20명)
  - 국정과제 1명, 협업과제 1명, 대통령 지시사항 1명, 대통령 지역공약 3명, 주요정책과제 1명, 법령 제·개정 8명, 핵심사업 2명, 신규업무 3명



※ 유동정원 배정 세부내역

구 분	주요항목	주요내역	배정인력	비 고
총 계			20	
본 부(15)	국정과제(1)	문화재 디지털 자원화 기반구축	1(7급 1)	
	협업과제(1)	세계유산 관리	1(6급 1)	
	대통령 지시사항(1)	문화재 정책기획 기능 강화	1(7급 1)	
	대통령 지역공약(3)	고도보존·육성	2(5급 2)	
		반구대암각화 보존·활용대책 마련	1(5급 1)	
	주요정책과제(1)	민속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1(7급 1)	
	법령 제·개정(5)	감사인력 강화	2(5급 1, 7급 1)	
		문화재 기초조사 강화	1(6급 1)	
		궁·능 소방방재시스템 구축	2(5급 1, 6급 1)	
	신규업무(3)	승례문 관리	2(6급 1, 7급 1)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지원		1(6급 1)		
소속기관(5)	법령 제·개정(3)	정책 수립·조정기능 강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5급 1, 6급 1)	
		수중발굴 기능 강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연구사 1)	
	핵심사업(2)	왕실유물 복원처리 * 국립고궁박물관	2(연구사 2)	

### Ⅲ. 기타 참고사항

○ 자체 운영계획 : 붙임참조

○ 기 타(건의사항)

- 부처별 특수성을 감안, 자율적인 지정 권한 부여(유동정원 지정 범위를 1~5% 이내에서 자율 지정·운영 등)

붙임 유동정원 시행 전·후 부서별 정원 현황 1부. 끝.

【붙임】

## 유동정원 시행 전·후 부서별 정원 현황

(단위 : 명)

부 서	총정원* (A)	4·5급 이하 유동정원상 대	유동정원			조정 결과 (B)	정원 변동 (B-A)
			권장 기준 (5%)	실제 지정	지정 내역		
<b>【본 부】</b>	270	180	9	15		272	+2
대 변 인	6	4	0.2	-		6	-
운영지원과	29	16	0.8	-		27	△2
기획조정관	48	39	1.9	2	· 감사인력 강화(2)	50	+2
문화재정책국	56	34	1.7	3	· 문화재 정책기획 기능 강화(1) · 문화재디지털 자원화 기반구축(1) · 민속문화유산 보존· 활용 강화(1)	56	-
문화재보존국	61	50	2.5	7	· 고도보존·육성(2) · 반구대암각화 보존· 활용 대책 마련(1) · 송례문 관리(2) · 문화재 기초조사 강화(1)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지원(1)	64	+3
문화재활용국	70	37	1.9	3	· 궁·능 소방방재시스템 구축(2), · 세계유산 관리(1)	69	△1
<b>【소속기관】</b>	434	137	6.8	5		434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92	33	1.6	2	· 정책 수립·조정 기능 강화(2)	92	-
국립고궁박물관	39	13	0.6	2	· 왕실유물 복원처리(2)	39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9	9	0.4	1	· 수중발굴 기능 강화(1)	59	-
유적관리소(3)	68	14	0.7	-		68	-
궁·종묘관리소(5)	88	31	1.6	-		88	-
조선왕릉관리소	74	33	1.7	-		74	-
국립무형유산원	14	4	0.2	-		14	-

\* <총 정원> 총정원은 2013년도 소요정원 확보 인력을 포함하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수시직제 확보 인력(+2명)을 제외한 「2013년 문화재청 유동정원 운영계획」 수립 시(6월)의 수치임

## [행정서비스]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정(문화재청)

### □ 추진배경

- 통일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결여로 인한 혼란 및 낭비
  - 그 동안 하나의 문화재가 여러 가지 영문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새로운 영문 명칭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일된 영문표기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초래하여 왔음
  - 외국인 입장에서 혼란을 초래하여 우리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장애를 초래하여 왔음

<'13.3.14일자 MBC 뉴스테스크>

“문화재 영어표기 제 각각  
“우리 문화재의 영어표기가 제각각 다릅니다. 우리도 헛갈리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떻겠습니까?”

- 이에 통일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 지식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에 문화재 관리 분야 국내적·국제적 활용의 증진 도모의 필요성 대두

### □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 '12년 이후)

- 2010년 이후 세미나, 공청회 등 15회에 걸쳐 문화재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 주한 외국인, 비영어권 유학생, 일반인 등 100여 명과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의견 수렴을 거침
- 추진 경과
  - 서울시청 등 유관기관 검토회의 3차례 : 2012. 3 ~ 7월
  - 주한외국인 토론회/대국민 공청회 : 2012. 4월/8월
  - 관계기관 및 지자체 의견수렴 : 2012. 9 ~ 10월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초안 작성 : 2012. 11 ~ 12월
  - 대국민 의견수렴 : 2012. 9 ~ 10월, 2013. 1 ~ 6월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24호)」 제정·시행
- 주요 내용

- 유적, 건조물, 명승문화재, 전적류, 불교문화재 등 각각의 문화재 유형에 맞는 17개의 세부 표기 기준 수립

◆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의 기본원칙 및 일반원칙

◆ 문화재 유형별 영문표기 세부기준

- 건조물, 유적 등 단일 구성 명칭인 문화재의 영문표기
- 도자문화재 등 복합 구성 명칭인 문화재의 영문표기
- 지명이 포함된 문화재의 영문표기
- 인명이 포함된 문화재의 영문표기 등

<영문 표기 예>

○ 건조물·유적 및 명승문화재

- 고유명사로 보아 내용상 중복이 있더라도 건조물, 유적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요소(‘궁’, ‘산’)의 의미역을 덧붙임  
(예, Gyeongbokgung Palace)

○ 서적·회화 및 무형문화재

- 국문 문화재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안에 의미역 병기  
※ 서적, 회화문화재는 띄어쓰기 예외인정(예, Samguk yusa)

## □ 주요성과

-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재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우리 문화재의 임의적 영문표기에 따라 동일 문화재를 상이하게 소개하고 이에 서로 다른 문화재로 오해할 수 있는 혼란 극복
- 학계, 번역계, 관광계, 문화재 활용과 안내·해설 분야 등에서 학술적·관광적·국제적 편익의 제공과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문화재 관리 지방자치단체, 학계, 번역계 등 우리 문화재 소개 분야 종사자에게 효율적인 지침 제공

<성공 요인>

- 기존의 표기 관행, 표기 기관, 종사 분야 별 다양한 의견 표출로 인한 혼란
  - 번역계, 관련 전문가 문화재위원, 문화재 정책고객,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 합의 유도
- 향후 국가지정 문화재 대상 개별 영문표기(4,000여 개) 용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표기 규칙의 활용도 향상 유도

## □ 향후 계획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영문 용례집 발간(2014년)
  -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에 따라 문화재 개별 영문 명칭의 제정·보급을 통해 문화재 소개 분야 종사자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 문화재 영어 용어집 작성(2015~2018)
  - 개별 문화재 명칭 외에 문화재의 번역, 소개 등 우리 문화재의 안내에 필요한 문화재 영어 용어집을 제작,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국보(2015), 보물(2016), 사적·명승·천연기념물(2017), 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2018)

## [정보공개제도] 문화재 행정정보의 적극 공개(문화재청)

### □ 추진배경

- 사전정보공개 범위의 대폭 확대로 국민권익 증진, 행정투명성 확보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한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 실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정에서 생산된 문화재 설명자료, 발굴·수리 보고서, 도면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

### □ 추진내용(또는 추진 경과)

- 문화재 관련 전문 학술조사연구보고서 총 1,172권의 디지털화 및 대국민 서비스(<http://www.cha.go.kr> → 문화재 도서 → 간행물 코너)
- 일반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위한 책갈피 기능, 원문 검색기능, 원문 확대축소 기능 등을 적용한 전자책(e-book) 제작 및 제공

### □ 주요성과

-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신문고) 문화재 행정정보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 관련 학술조사연구보고서 전자파일(PDF) 제공의 긍정적 이용만족도는 78.9%로 평균 76.68%보다는 2.22%가 높은 것으로 평가
- 문화유산 행정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전정보 공개 활성화
- 학술조사연구보고서(송례문, 경복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즉시공개 안내로 정보공개 처리 기한 단축 및 청구인 만족도 제고

#### 〈성공 요인〉

- 기존 문화재 관련 전문 학술조사연구보고서의 정보 제공에 있어 기능적 측면(책갈피 기능, 검색기능 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일반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문화재 관련 전문도서의 적극 공개로 사전정보공개 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 정보공개 모델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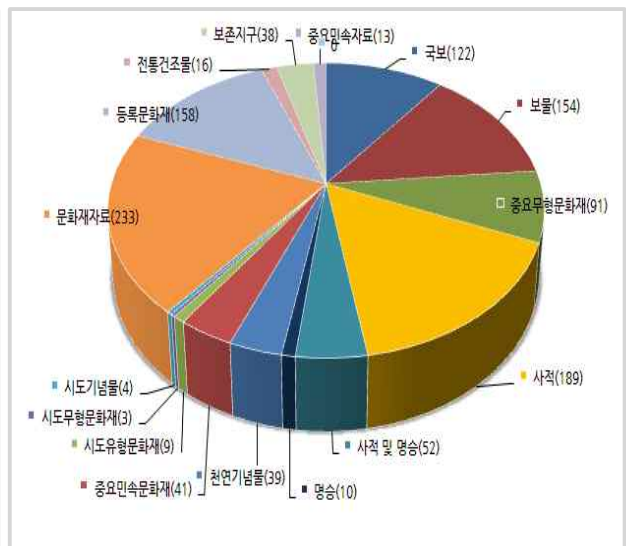
## □ 향후 계획

- 선제적 · 능동적 정보공개를 위한 문화재 관련 전문 학술조사연구 보고서의 디지털화(e-Book) 및 서비스 확대('14년)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DB구축 대상에 우리 청이 발간한 문화재 관련 각종 보고서를 포함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책(e-Book) 서비스 추진('13년 1,172권 ⇒ '14년 4,300권으로 확대)
- 우리 청 홈페이지 기능 개편 시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메뉴 재정비 추진('14년)
  - 사전정보공개 신규 발굴 및 확대에 따른 카테고리별 분류 정비
  -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과 사전정보공개 콘텐츠 적극 개발

## 문화재 관련 학술연구보고서의 전자책 사전공개 확대

- 문화재 관련 학술연구보고서의 전자책(e-Book) 서비스 확대
  - ('13.10.14) 문화재청 자료실 기능강화 및 활성화 계획 보고
    - \* 문화유산3.0 정책 기반의 문화재 학술연구보고서 디지털화 및 공개·공유·개방 확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등 수립 보고
  - ('13.10.10) 문화재 관련 학술연구보고서 1,172권의 전자책(e-Book, PDF파일) 홈페이지 업로드 서비스 추진
    - \* (중전) 문화재 학술조사연구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이 어려움 ⇒ (개선) 책갈피, 원문 및 키워드 검색 기능을 탑재한 전자책(e-Book, PDF 파일)으로 변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 용이
  
- 문화재 관련 학술연구보고서 디지털화(e-Book, PDF파일) 현황

구분	문화재 종목	수량	비고
1	국보	122	
2	보물	154	
3	중요무형문화재	91	
4	사적	189	
5	사적 및 명승	52	
6	명승	10	
7	천연기념물	39	
8	중요민속문화재	41	
9	시도유형문화재	9	
10	시도무형문화재	3	
11	시도기념물	4	
12	문화재자료	233	
13	등록문화재	158	
14	전통건축물	16	
15	보존지구	38	
16	중요민속자료	13	
소 계		1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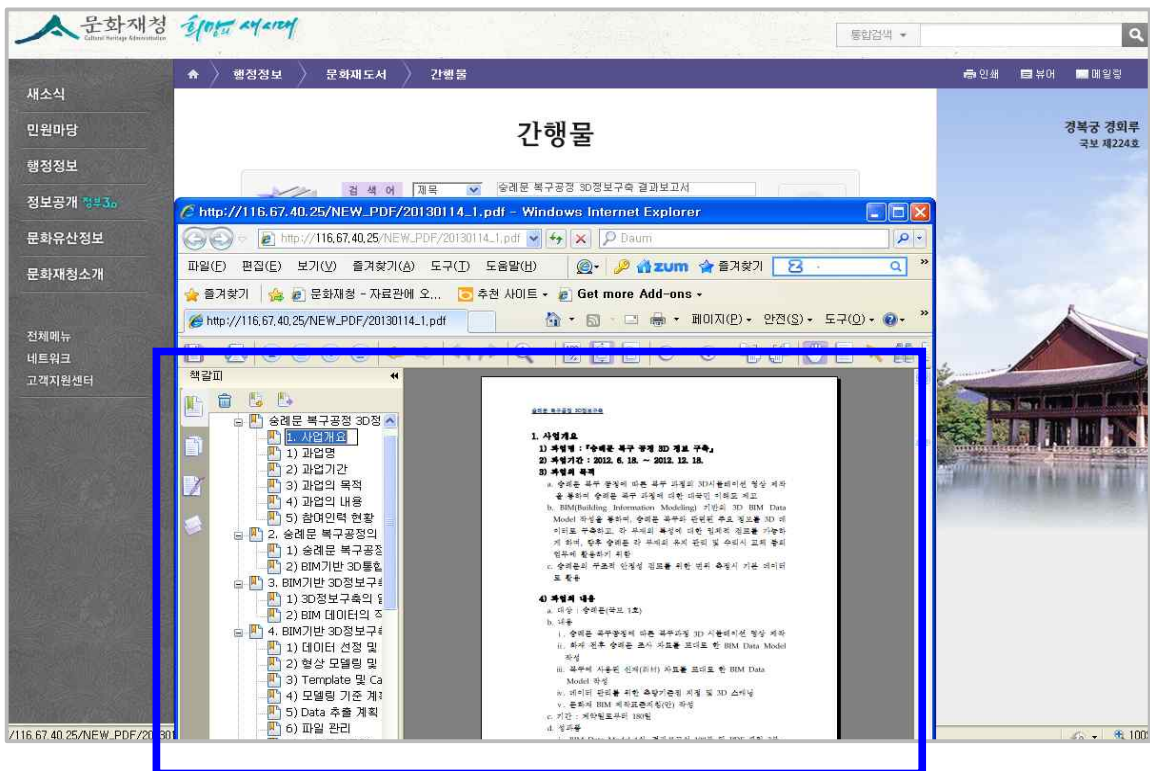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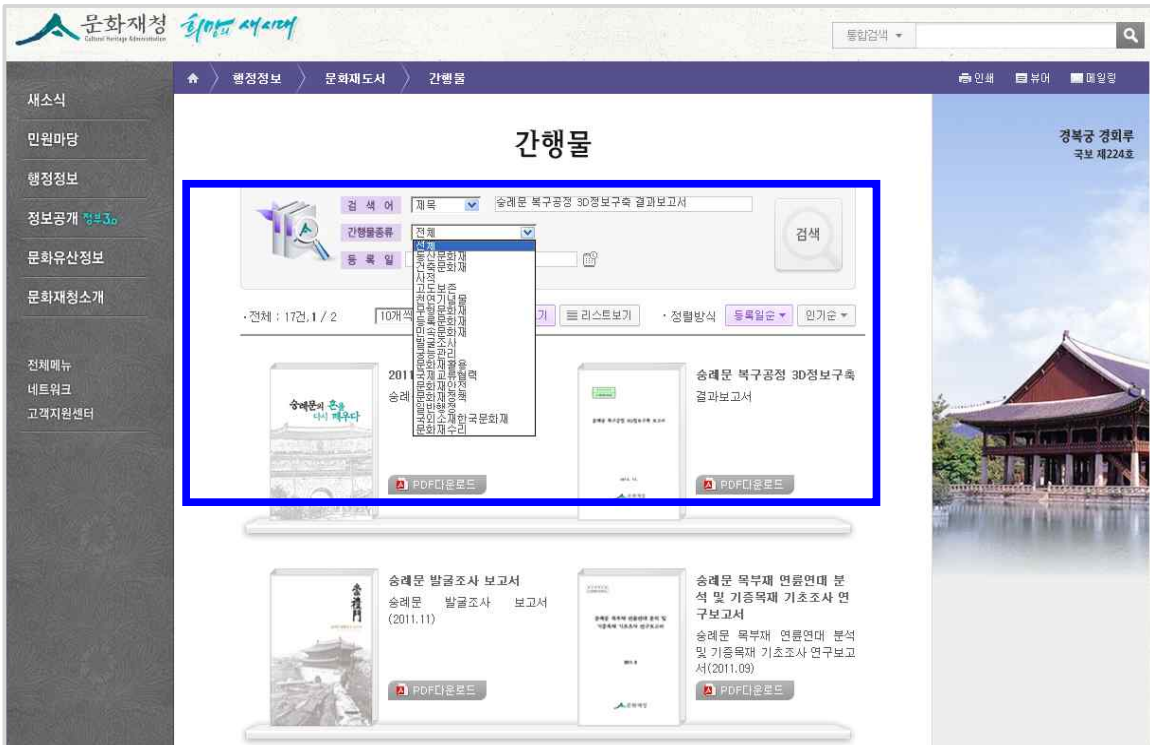




## 문화재 관련 전자책 홈페이지 서비스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간행물>

○ 제목, 간행물종류, 등록일자별 검색, 다운로드, 책갈피, 원문검색 지원 ⇒ 이용편의성 향상



## 문화재 행정정보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I 설문조사 목적

- 우리 청의 국정과제와 문화유산 3.0과제로 추진한 정보공개 및 문화재 관련 전자책 서비스 등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
- 향후 문화유산 정보공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 방안 모색

\* 국정과제(112-1-3) :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훼손 시 원형복원 및 콘텐츠자원화

\*\* 문화유산 3.0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II 설문조사 개요

- 설문기간 : 2013. 11. 13(수) ~ 11. 27(수)(공휴일 포함 15일간)
- 설문대상 : 국민일반
- 설문내용 : 8개 항목
  - 정보의 접근성(1), 내용의 충실성(1), 이용편의성(2), 이용만족도(3), 정책의견(1)
- 설문방법 : 국민신문고의 정책토론평 활용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설문조사 등재

### III 설문조사 결과(요약)

- 참여자 : 95명(참여자 95명 중 남성 24명, 여성 12명 응답, 미응답 59명)
  - \* 연령대별 현황 : 20대 4명, 30대 9명, 40대 8명, 50대 10명, 60대 이상 5명, 미응답 59명
  - \* 지역별 현황 : 서울 5명, 부산 3명, 광주 2명, 대전 9명, 경기 5명, 대구·인천·울산·충남·충북·제주 각 1명
- 응답률 : 100%(참여자 95명 중 95명 응답)
- 만족도 점수 : 76.68점
  - 국정과제 성과목표 점수는 73점이며 이번 이용자 만족도 점수는 76.68점으로 목표 대비 3.68점이 높게 나와 105%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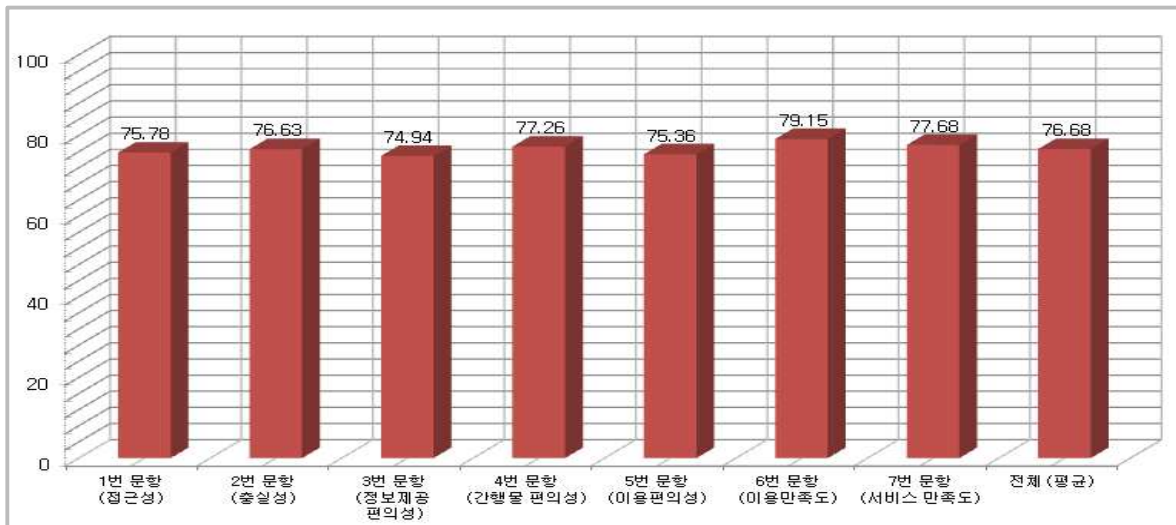
○ 만족도 점수 분포도

(단위 : 명/점)

문항	문항별 응답자	배점별 응답자					총점	평균	100점 환산
		1점	2점	3점	4점	5점			
1	95	2	7	14	58	14	360	360/95=3.78	75.78
2	95	1	3	19	60	12	364	364/95=3.83	76.63
3	95	2	3	22	58	10	356	356/95=3.74	74.94
4	95	1	5	15	59	15	367	367/95=3.86	77.26
5	95	1	5	21	56	12	358	358/95=3.76	75.36
6	95	1	3	16	54	21	376	376/95=3.95	79.15
7	95	1	2	16	64	12	369	369/95=3.98	77.68
소계	665	9	28	123	409	96	2,550	2,550/665=3.83	76.68

\* 설문 문항별 만족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을 최종 만족도 점수로 나타냄

○ 각 문항별 만족도 현황



○ 시사점

- 간행물 코너의 문화재 관련 전문 보고서의 전자책(e-Book, PDF파일)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79.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국민 수요에 맞춘 전자책 서비스 지속 확대 필요**
- 정보공개 메뉴의 이용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74.94점**으로 가장 낮고, 메뉴 접근성(**75.78점**), 내용의 충실성(**76.63점**), 콘텐츠 이용편의성(**75.36점**) 등은 전체 평균 **76.68점**보다 **1.32점~1.74점** 낮음  
⇒ **정보공개 메뉴의 채정비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 (인사관리) 생산적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문화재청)

### □ 추진배경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
-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양양'
  - ※ 단순 업무시간(업무량) 관리체제 → '성과'중심의 근무체제로 전환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여 활성화할 필요
  - 선진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은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 추진내용( 또는 추진 경과)

- 문화재청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수립('13.3.14)
  - 우리 청 유연근무제 자율 목표 설정

✓ 유연근무제 12일(월1회) 이상 이용자 비율\*이 전체 1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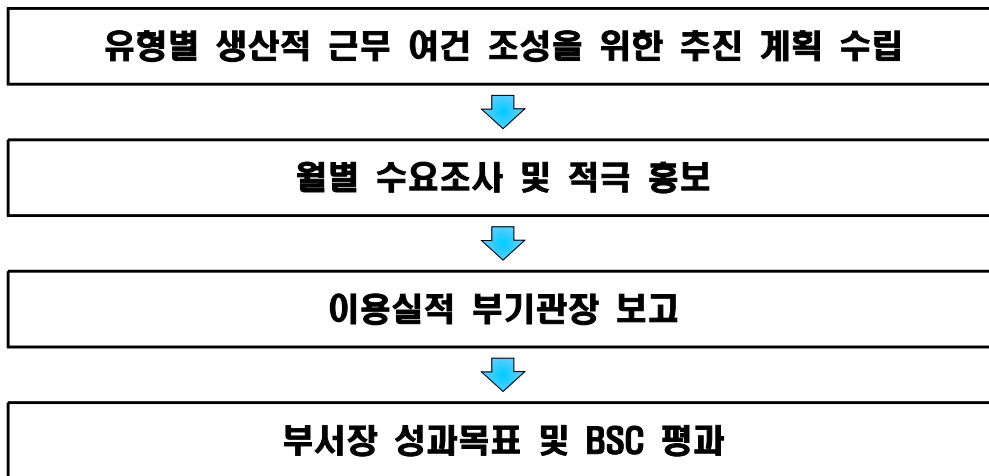
\* 유연근무제 실시인원/기관별 총 현원

✓ 원격근무제 이용자 비율\*이 3% 이상

\* 원격근무제 1일(연1회) 이상 실시인원/유연근무제 1일(연1회) 이상 실시인원

- 매월 1회 수요조사를 통한 실적 점검
- 유연근무제 이용 실적 부기관장 보고
- 문화재청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수립('13.4.16)
  - 우리 청 유연근무제 자율 목표 설정(부서원의 30% 이상)

- 월별 연가사용계획 수립
- 부서장 성과목표 및 BSC 공통지표 설정
- 연가활용 실적 부기관장 보고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13.11.18)
  - 수도권 거주 공무원 스마트 워크센터 적극 이용
  - 수도권 비거주 공무원은 스마트워크센터 체험 근무 이용
- 추진절차



□ 주요성과

지표명	우리 청 자율 목표	추진실적	비고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	<b>○ 10% 이상</b> - 유연근무제 12일 이상 실시 인원 / 총 현원('13.12.31기준) - 현업근무자 및 실근무일 2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b>○ 16.6%</b> - 101명 / 609명	<b>달성</b>
원격근무제 이용 비율	<b>○ 3% 이상</b> - 원격근무제 1일 이상 실시 인원 / 유연근무제 1일 이상 실시 인원	<b>○ 4.2%</b> - 5명 / 120명	<b>달성</b>
연가사용 이용 비율	<b>○ 30% 이상</b> -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 / 1인당 평균 연가 일수	<b>○ 61.6%</b> - 10,815.8일(20.5일) / 17,550일(12.63일)	<b>달성</b>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b>○ 76회</b> - 수도권 거주 공무원 수	<b>○ 79회</b>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인원 * '13.7.1 ~ 12.31 기준	<b>달성</b>

### 〈성공 요인〉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유형별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 월별 수요조사 등을 통한 주기적인 실적 점검 및 홍보
- 부서장 성과목표 및 BSC 공통지표 설정으로 성과와의 연계
- 연간 추진 실적 부기관장 보고

### □ 향후계획

- 문화재청 직무 특성을 고려한 2014년 생산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및 부기관장 보고('14.2월)
  - 성과 중심의 자율목표 설정

붙임 1. 2013년 부서별 연가사용현황 1부.

2. 2013년 부서별 유연근무이용현황 1부. 끝.

## 2013년 부서별 연가사용현황

□ 청 평균 연가 사용률 : 61.6%

부서명	법정연가일수	연가사용일수	사용률
<b>문화재청</b>	<b>17,550(20.5)</b>	<b>10,815.8(12.63)</b>	<b>61.6%</b>
대변인실	137	64	46.7%
운영지원과	556	263	47.3%
기획조정관실	1,017	549.5	54.0%
기획재정담당관실	254	123	48.4%
창조행정담당관실	224	129.5	57.8%
법무감사담당관실	226	106.5	47.1%
정보화담당관실	291	180.5	62.0%
<b>문화재정책국</b>	<b>1,625</b>	<b>845.1</b>	<b>52.0%</b>
정책총괄과	298	164	55.0%
무형문화재과	227	106	46.7%
발굴제도과	320	214.1	66.9%
안전기준과	758	344	45.4%
<b>문화재보존국</b>	<b>1,455</b>	<b>764</b>	<b>52.5%</b>
보존정책과	466	259	55.6%
유형문화재과	488	275	56.4%
천연기념물과	250	116.5	46.6%
수리기술과	228	101.5	44.5%
<b>문화재활용국</b>	<b>1,442</b>	<b>864.5</b>	<b>60.0%</b>
활용정책과	290	152.5	52.6%
궁능문화재과	620	429.5	69.3%
국제협력과	222	118	53.2%
근대문화재과	288	157.5	54.7%

부서명	법정연가일수	연가사용일수	사용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159	675.6	58.3%	
국립문화재연구소	3,691	2352.3	63.7%	
본 소	1,952	1240.1	63.5%	
지방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421	296	70.3%
	부여문화재연구소	298	179.7	60.3%
	가야문화재연구소	260	154.6	59.5%
	나주문화재연구소	240	161.6	67.4%
	중원문화재연구소	198	122.5	61.9%
	문화재보존과학센터	322	197.8	61.4%
국립고궁박물관	707	449.4	6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196	780.5	65.3%	
유적소	현충사관리소	703	552.4	78.6%
	세종대왕유적관리소	460	286.6	62.3%
	칠백의총관리소	266	163.5	61.5%
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501	288.5	57.6%
	창덕궁관리소	404	254	62.9%
	창경궁관리소	336	196	58.3%
	덕수궁관리소	282	202.5	71.8%
	종묘관리소	291	183	62.9%
조선왕릉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1,615	995.9	61.7%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447	292.5	65.4%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464	253.5	54.6%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420	268.5	63.9%
국립무형유산원	157	85.5	54.5%	



# 2013년 부서별 유연근무 이용현황

□ 유연근무제 이용 가능 인원 : 609명

(단위 : 명)

총 인원 (A)	유연근무제 이용가능 인원(B)	제외인원				비고
		계(C)	휴직자 등	현업(교대) 공무원*	2개월 미만 근무자	
905	609	296	44	250	2	(A)=(B)+(C)

□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 : 101명(12일 이상 실시인원)

(단위 : 명)

부서명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b>전체</b>	<b>8</b>	<b>54</b>	<b>51</b>	<b>9</b>	<b>5</b>
<b>대변인실</b>	<b>0</b>	<b>0</b>	<b>0</b>	<b>0</b>	<b>0</b>
<b>운영지원과</b>	<b>0</b>	<b>2</b>	<b>0</b>	<b>0</b>	<b>0</b>
<b>기획조정관실</b>	<b>1</b>	<b>1</b>	<b>1</b>	<b>1</b>	<b>0</b>
기획재정담당관실	1	1	0	0	0
창조행정담당관실	0	0	0	0	0
법무감사담당관실	0	0	0	0	0
정보화담당관실	0	0	1	1	0
<b>문화재정책국</b>	<b>1</b>	<b>6</b>	<b>0</b>	<b>1</b>	<b>0</b>
정책총괄과	0	1	0	0	0
무형문화재과	0	2	0	0	0
발굴제도과	1	3	0	1	0
안전기준과	0	0	0	0	0
<b>문화재보존국</b>	<b>0</b>	<b>4</b>	<b>0</b>	<b>0</b>	<b>0</b>
보존정책과	0	1	0	0	0
유형문화재과	0	3	0	0	0
천연기념물과	0	0	0	0	0
수리기술과	0	0	0	0	0
<b>문화재활용국</b>	<b>0</b>	<b>0</b>	<b>0</b>	<b>0</b>	<b>0</b>
활용정책과	0	0	0	0	0
궁능문화재과	0	0	0	0	0
국제협력과	0	0	0	0	0
근대문화재과	0	0	0	0	0

부서명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0	8	1	0	0
국립문화재연구소	4	20	23	6	0
본    소	3	9	14	6	0
지방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0	3	0	0
	부여문화재연구소	0	5	4	0
	가야문화재연구소	0	0	1	0
	나주문화재연구소	0	1	2	0
	중원문화재연구소	0	1	0	0
	문화재보존과학센터	0	1	2	0
국립고궁박물관	1	7	16	1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1	4	0	2
유적소	현충사관리소	0	0	1	0
	세종대왕유적관리소	0	0	1	0
	칠백의총관리소	0	0	0	0
공관리소	경복궁관리소	0	1	0	0
	창덕궁관리소	0	1	1	0
	창경궁관리소	0	0	0	0
	덕수궁관리소	0	1	0	0
	종묘관리소	0	0	0	0
조선왕릉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0	2	3	0
	동부지구관리소	0	1	0	0
	중부지구관리소	0	1	1	0
	서부지구관리소	0	0	0	0
국립무형유산원	0	0	0	0	1

## [정보화 관리] 문화재 규제구역정보 지도검색 시스템 개선 (문화재청)

### □ 추진배경

- 문화재 규제정보의 소극적 공개로 국민 불편 가중
  -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 정보제공으로 실제 규제구역의 위치 및 상세 규제 내용의 확인·열람 불편
    - \* 게시판, 첨부파일 형태의 정보제공으로 정확한 규제지역 위치확인 불가
-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이용체계 개선 필요
  - 최신의 규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 추진내용( 또는 추진 경과)

- 건설공사시 적용되는 모든 문화재주변 토지이용 규제정보의 적극 공개
  - (공개대상) 국가·시도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총 9종) 등
  - (공개내용) 지정문화재 상세 규제구역 및 관보 고시 이력정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종류별 구역정보 등으로 서비스대상 대폭 확대

구 분		공개내용	
		확대 전	확대 후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고시문, 고시도면	최신 고시정보만	기존 고시이력 전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미제공	구역별 규제내용
	위치정보	단순 '위치점'만	각 구역별 범위
	정보갱신주기	부정기	수시(정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개대상	1종	9종(전체 공개)
	제공정보	위치 및 설명정보	조사내용(기간, 결과 등)
	정보갱신주기	1년	수시

- (공개방법)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의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메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통해 정보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
  - 이미지 구역정보를 지도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한 공간DB로 구축
  - 기존 지도서비스의 검색·조회, 지도컨트롤 기능 개선
  -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추가하여 정보 가독성 향상
  - ‘지번검색’, ‘공간검색’에 의한 규제정보 통합표출시스템 구축

<정보이용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 규제정보 갱신주기를 대폭 단축하여 최신정보 제공체제로 전환

- 정보공개 주기를 기존 '부정기'에서 '수시', '정기'로 변경
  - \* 지정문화재 '부정기' → '수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년' → '3개월'로 변경
- 주기적 현지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의 품질향상 추진
  - \* 연간 10개 시·군 현지보완조사 실시하여 정보(위치, 사진, 설명 등)갱신

○ 문화재 구역 원본자료의 대외개방 확대

- 규제지역 조정, 지도제작, 시스템구축, 조사연구 분야 등에 필요한 문화재 구역정보 대외유통 실시
  - \* 최근 3년간 연평균 20개 기관에 연간 약 60만 건의 정보개방
- On/Off-Line에 의한 문화재 구역 원본자료 유통시스템 구축

□ 주요성과

○ 문화재정보 사전제공으로 건설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 문화재정보 사전확인 후,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계획 수립으로 문화재 인허가·조사 소요비용의 절감효과 발생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개정보에 의한 지표조사 생략, 발굴조사 회피로 사업시행자 경제적 부담 최소화(연간 약 115억 비용절감 효과)

○ 국민의 문화재 규제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투명한 규제행정 실현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 문화재 규제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접근채널 다양화, 이용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연간 정보서비스 이용자수 증가 및 만족도 향상
  - \* 서비스 이용자 전년대비 약 4배 증가, 만족도 크게 향상 '12년 82.3 → '13년 86.7

### 〈성공 요인〉

- **문화재 규제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기존 미공개 지정·매장문화재 규제정보를 적극 발굴·공개하여 문화재 규제행정의 투명화 및 국민이 원하는 정보공개 실천
- **문화재 규제정보 공개를 위한 협업체계의 합리적 재설계**
  - 규제정보 생성 즉시, 정보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부서, 기관 간 협업체계 개선
  - 국민의 문화재 구역정보 가독성 향상을 위해 지도데이터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주)NHN(네이버) 등과 긴밀한 협의체계 형성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네이버 포털지도서비스 연계, 지자체 시도지정 문화재의 고시정보 수시갱신체계 확립 등
- **최신 공간정보 기술의 적극 도입을 통한 국민 중심의 정보이용 시스템 개발**
  - 기존 게시판 형태의 ‘문화재 중심’에서 ‘국민 위치중심’의 정보이용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
  - 최신 IT기술의 적극 도입으로 국민의 정보서비스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여 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편 최소화

### □ 향후 계획

- (‘14년 상반기) 지정·매장문화재 공간정보 확충
  - 국가지정문화재 3차원 모델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정보 확충
- (‘14년 하반기) 문화재 규제지역 공간정보의 개방공유서비스 실시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지표·발굴조사보고서 원문서비스 추진
  - 문화재 규제지역 공간정보의 대국민 온라인 유통서비스 실시
  - 문화재 공간정보 OpenAPI 서비스 실시
- (‘15년) GIS기반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 활용서비스 확대
  - 지도기반 문화재 지역지구 고시정보 열람서비스 체계 구축
  - 토지이용규제지역 공간정보 및 3차원 지도플랫폼 연계 실시
- (‘16~’17년) 대용량 문화재 공간정보 유통서비스 및 사용자 참여형 규제지역 분석시스템 구축
  - 3차원 라이다, 모델링데이터 등 대용량 문화재데이터 유통
  - 문화재 인허가처리 공간통계 정보 제공
  - 3차원 지도기반의 건물높이, 양각 등 입체분석시스템 구축

- ※ 별첨 1.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제공 지도서비스 개념도  
2.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공개 지도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3. 문화재 규제지역 지도서비스 내용 소개

<별첨 1>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제공 지도서비스 개념도>



문화재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재보존관리 지도서비스**  
<http://gis-heritage.go.kr>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건설공사 행위 제한내용을 지도기반으로 제공합니다.**

문화재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한하는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규제내용을 위치검색과 정보조회를 통해 건설공사 예정지의 문화재 규제정보를 지도기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공사 예정지 검색**  
지번검색, 공간검색으로 건설공사 예정지의 위치확인

**2** **문화재 위치조회**  
건설공사 예정지 주변의 문화재 분포현황 확인

**3** **문화재규제 정보조회**  
건설공사 예정지의 지정·비지정문화재의 규제내용 조회

**4** **문화재 인허가 상담**  
문화재 인허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문상담센터 연결

**주요서비스**



지번검색, 공간검색으로 특정지역의 문화재 분포현황과 규제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국가 지정문화재의 규제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도지정문화재, 동북문화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재 명칭으로 위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형성변경허가사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규제사항과 해당 법령, 문화재 기본설명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 2>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공개 지도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 Before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정보만 제공
- 지도기반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 미제공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정보이용 불가

### After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DB 등록
- 위성사진, 지적도 기반에서 허용기준 검색가능
- 규제지역의 상세 건축행위 허용기준 정보 이용

<별첨 3> <문화재 규제지역 지도서비스 내용 소개>

### 용도지역별 정보표출

**시도문화재 보호조례**

제44조(건설공사 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1. 국가지정문화재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500m이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0m이내

- 각 광역시도별, 용도지역지구별로 적용되는 지정문화재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지역 정보 제공
- 정보보기를 통한 문화재명, 규제구역, 허용 기준 및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등 상세정보 제공

**용도지역 DB 탑재** → 문화재 GIS DB

**해당 용도지역 확인** → 녹지지역 관리지역

**시도별 범위 적용** → 국가지정문화재  
 녹지지역 500m이내  
 주거지역 200m이내

**용도지역별 범위적용**

문화재명	규제구역	허용기준 및 규제내용	관련법령
국가지정문화재	500m이내	건물을 짓는 것은 건물이 아닌 사람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지대나 경사지 등 지정된 구역에 제한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시도지정문화재	200m이내	건물을 짓는 것은 건물이 아닌 사람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지대나 경사지 등 지정된 구역에 제한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2항